

#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의 분석

## An Analysis of the Class "Philosophy" in the 4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of KDC

박 옥 화(Ok-Wha Park)\*\*

### 목 차

- |                 |              |
|-----------------|--------------|
| 1. 서론           | 4. 目과 細目の 분석 |
| 2. 개정방침 검토      | 5. 개선된 부분들   |
| 3. 綱의 구분과 서열 검토 | 6. 결론        |
| 3. 1 綱의 구분      |              |
| 3. 2 綱의 서열      |              |

### 초 록

이 논문은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철학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 과정에서 개선사항과 아울러 문제점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즉 항목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 서양인명 표기상의 오류들을 바로 잡은 것,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것 등이 개선사항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전 분야가 균형있게 전개되지 못한 것, 구분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항목 간의 수평·수직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정되지 못한 것, 개념의 오용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이해의 혼란에서 파생한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예의 문제점들은 철학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필자는 다음 개정을 위한 분류위원회구성에 문헌분류전문가 외에 각 주제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문헌분류법의 근본적 개선은 물론 통용성 제고에도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 ABSTRACT

Korean Library Association brought out the fourth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of KDC last year. Compared with the former edition it is a marked improvement. Nevertheless, it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examine and evaluate the edition more effectively, I confined my study to the class "Philosophy". In my judgment the problem resolves itself into following three points: 1) Each regions, branches of philosophy is not properly balanced. As is generally known KDC was originally derived from DDC. As a result KDC and DDC are similar with regard to their stress on the philosophical tradition of the West. In consequence, it is lacking in universality. 2) The classifiers neglected on several occasions the logical regulations of classificati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s are not strictly respected. 3) The persons concerned were not well informed of philosophical conceptions and genealogies. There are some misused conceptions and disorganized genealogies of philosophy.

To my knowledge these problems originate in the lack of professional understanding of philosophy necessary to make the work satisfactory.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inevitable for the classifiers, to ask to specialists in philosophy for mutual cooperation. Without their professional advices the classifiers will find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s and in improving the classification

이 논문은 1995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1997년 6월 30일

## 1. 서론

지난 해 8월 韓國十進分類法(이하: KDC) 제4판(이하: 개정판)이 나왔다. 제3판이 나온 1980년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최근의 학문 분화와 발전 속도에 미루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는 개정판을 상당히 기다려 오던 터여서 무척 반기고 있다.

이번 KDC 개정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미 1990년 봄부터 개정에 착수하였으니 그 작업에만 6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동원된 학자의 수도 제3판 때보다 증가하였다. 거기에다 작업의 전문화 등 이전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즉 위원회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업을 분담, 각 그룹에 위원장을 두고 그 아래 위원을 두어 분야별 책임 개정을 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改正試案'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4, 177-205)을 만들어 공개한 후 일선기관 및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개정판은 本表만 950 쪽이 웃도는 방대한 것으로서, 제3판의 본표가 600쪽에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상당한 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적인 면만으로도 분류위원회의 각별한 노고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개정판이다. 이 분류법을 발행한 한국도서관협회의朴啓弘회장이 개정판 서문에서 이로써 “틀이 좁고 짜임새가 모자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께 큰 불편”을 준 제3판에

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큰 틀”이 잡히게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6, v)고 자평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개정 관계자들이 그 작업의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정 보완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 개정의 연속성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KDC가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가야할 길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 학계가 해야할 과제는 개정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공과를 논하는 일이다. 평소 문헌분류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나 학자들이 개정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다음 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KDC가 더 이상 소수 편자의 소관업무에 그치지 않는 범도서관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몇해 동안 학문의 분류와 문헌의 분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박옥화, 1992a ; 1992b ; 1994). KDC 개정판이 나온 이제 그것을 면밀히 검토, 평가함으로써 제5판의 준비에 작은 기여가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개정판에 대한 평가라고는 했지만 한 개인의 힘으로 전 분야를 검토대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필자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다룬 바 있는 철학류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철학류 또한 다른 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정원칙에 따라 개정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개정판 전체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검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개정의 방침들을 살펴 그 개정방향을 확인한다. (2) 다음으로 綱의 區分과 序列化 등 전체적 골격을 살펴본 후 미흡한 점을 지적한다. (3) 그리고 나서 目과 細目的 전개에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한다. (4) 이어서 개선된 부분을 논한다. (5) 결론적으로 총평을 하고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해서는 문헌분류의 이상이 기준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은 지식구분이다. 문헌이 기록으로 축적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식분류법과 문헌분류법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일찌기 H. E. Bliss는 문헌분류가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지식체계에 따를 때 그 효용성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Bliss, 1939, 37). 그런가 하면 J. E. L. Farradane도 분류의 원리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하여 (박옥화, 1992b, 43),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에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하였다. 문헌분류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근거들을 갖고 있지 않다. 철학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이미 철학에서의 지식구분과 문헌분류사이의 상관관계를 심도있게 논한 바 있다 (박옥화, 1994, 7-16). 이에 아래에서는 철학에 대한 보편적 지식구분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개정방침 검토

개정방침은 제3판에서는 천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개정방침의 명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분류에 앞서 분류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체계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선결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의 “分類委員會報告”가 확정한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類·綱·目的 變更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2. 새로운 學問發展의 趨勢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項目을 配定한다.
3. 3版의 精神을 가능한 한 살리되 細目 部門은 改正 또는 展開한다.
4. 舊表目中 適切하지 못한 項目은 新項目으로 代置한다.
5. 科學技術 分野 등 急變하는 主題는 필요한 細目을 과감히 展開·細分한다.

거기에다 “위와 같은 改正方針을 基本으로 하여 DDC 20版(1989年)과 「日本十進分類法」9版 試案 등을 參考하여 日進圖書館의 分類擔當 司書들이 겪고 있는 問題點을 最大限으로 受容하여 展開하도록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6, vii)고 덧붙였다.

이렇듯 분류위원회는 처음부터 류에서 목에 이르기까지는 가능한한 손대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기존 골격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대폭적인 개정이 아님을 시

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학문발전의 추세를 반영해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함으로써 기존의 분류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기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세목부분을 개정 전 개한다고 하여 3판의 정신이 계승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치 못한 항목을 찾아내어 새항목으로 대치시킴으로써 항목설정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 생겨나는 분야와 그것에 상응하는 주제에 따라 세목을 대폭 전개한다고 하였다. 거기에다 DDC와 일본십진분류법 시안을 참고했다고 함으로써 이 분류법이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방침이 서로를 보완한다기 보다는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첫번째 방침은 그 큰 틀을 유지하려는 나머지, 다른 방침의 수행에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마지막 방침은 첫번째 방침을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침들도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혼란스럽게 수립된 이들 방침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뚜렷하다. 즉 기존의 개정 정신 아래, 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고, 부분적 개선과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싸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애매한 방침이다. 거기에다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과 일본의 분류법을 어떤 원칙에 따라 참고한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 성격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들 상호배타적인 방침에서 개정판의 한계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DC 제4판 철학류를 검토하되, 綱과 目的의 전개를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문제의 대부분이 “類·綱·目的 變更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는 KDC의 개정방침에서 야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3. 綱의 區分과 序列 檢討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KDC의 분류체계, 主類서열과 분류번호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은 DDC이다. 이 점을 개정판의 〈序說〉에서도 밝히고 있다. 거기에 “KDC는 主類(第1次區分)의 順序를 優秀하고 實用的인 分類法인 DDC를 基礎로 排列했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6, 1)고 되어 있다. 이것은 철학류에도 해당하는 해설이다. 따라서 이 철학류의 검토에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 논의의 대상은 철학류에 있어서의 綱의 구분과 그 서열이다. 즉 그 제2차 구분이 과연 보편성을 띠고 있는가? 그리하여 철학의 전 영역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가? 달리 말하여 마땅히 綱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들이 고루 배정되어 있는가? 격에 맞지 않게 綱으로 배정된 것은 없는가? 이들 綱의 순서는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가? 즉 선후관계가 논리

적으로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현안이 되는 이유는 그 대답 여하에 따라 類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데 있다.

### 3.1 綱의 구분

이미 밝힌 대로 철학류의 綱 구분과 서열화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DDC는 1876년에 미국에서 창안된 것으로서 1996년까지 20차례나 개정되어 왔다. 이후 그것은 미국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채택되면서 유력한 문헌분류표로서 그 입지를 강화해 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DDC는 그의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이들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歐美(엄격히 말하면 미국)본위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통용성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 동일한 계층 수준의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9라는 제한된 구분으로 축소되므로써 새로운 주제를 삽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학문들의 서로 다른 성장비율을 신속성있게 수용할 수 없어 학문간의 구성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될 것이다 (박옥화, 1994, 73).

그러나 엄격히 본다면 이들 가운데서 국제통용성 문제는 DDC가 처음부터 국제적 문헌분류법으로 창안된 것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되며, 그것이 십진법으로 출발한 점에 미루어 본다면 새로운 類를 삽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이

것은 DDC 외 다른 십진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9라는 수의 제한된 구분이란 비십진법의 관점에서나 가능한 비판이다. 학문구성상 불균형 또한 類나 綱 등 상위항목의 조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나라의 경우, DDC를 그냥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자국우선권에 입각, 부분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이질적 두 영역을 조화있게 통합할 수 있는 상위의 논리가 확립되지 않는 한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우려는 KDC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KDC가 DDC를 모범으로 하기는 했지만 물론 DDC를 침삭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KDC는 자국우선권을 반영하여 어느 정도는 한국적 현실에 부응해 왔다. 제한된 틀 속에서이기는 했지만 “140 經學”에서 볼 수 있듯이 綱의 명칭이나 순서 등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독자성을 내세울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부분적 침삭이 오히려 전체의 균형을 깨고 삽입된 부분의 이질성을 뚜렷이 하는 문제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인식론” 항목처럼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어, 차라리 DDC를 그대로 수용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이렇듯 KDC가 동양철학을 역점적으로 전개하여 어느정도 DDC와 차별화를 꾀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DDC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KDC는 초판 이후 세 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틀의 변화는 없었다. 먼저 KDC 개정판 철학류의 綱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b>哲學</b>
100	哲學
110	形而上學
120	
130	哲學의 體系
140	經學
150	아시아(東洋) 哲學, 思想
160	西洋哲學
170	論理學
180	心理學
190	倫理學, 道德哲學

이 골격은 제3판과 일치한다. 개정원칙에서 밝힌 대로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구분이 철학내의 지식구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학에는 주제별 연구와 연대기적 연구 그리고 지역철학에 대한 연구가 있다. 철학사전은 물론 철학관계 개설서를 보면 이런 관점에 따라 집필되고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DDC도 주류 전개에서 이 기준을 따랐다. 전통적으로 주제별 연구에는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이 있고, 연대기적 연구에는 철학의 체계에 대한 사적 조망이 있다. 이 때는 철학의 역사를 흔히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로 나눈다. 그리고 지역적 구분

에 따른 것으로 크게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있고, 세분하면 동양철학에는 중국철학이나 인도철학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철학이 첨가된다. 그리고 서양철학은 대륙의 철학과 영미철학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개정판의 綱區分에는 이러한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철학의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동위의 주제를 동위의 항목, 즉 綱으로 배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 부당하게 하나를 다른 하나에 포섭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홀하게 다룬 것도 있다. 綱으로 설정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듯이 판단되는 것도 있고, 綱의 명칭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러한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른 綱과 동위관계에 있는 주제인데도 독립 綱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인식론과 미학이 있다. 앞서 살펴 본 대로 이들은 형이상학 등과 동격의 주제들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 철학과 의 교과편성에 반영되어 있다. 동위라 함은 이들이 서로 상하의 포섭관계에 있지 않음을 말한다. 즉 동급, 동격이라는 말이다. 개정판 분류위원회는 구분지가 9로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 전개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3) 강 120을 공기호로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 인식론을 綱으로 설정해야할 근거

를 살펴보자. Hessen이나 Blazek & Avera의 주제구분에 따르면 인식론은 형이상학, 윤리학 등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온 철학의 핵심 분야의 하나이다 (박옥화, 1992b, 31). 이를 외면하고 개정판은 제3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110 形而上學” 아래 한 목적으로 설정, “115 認識論”으로 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배정이다.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론은 존재의 문제를 취급하는 형이상학과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하나를 다른 하나 아래 설정함으로써 중요 주제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 왔다. DDC는 인식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DDC 20판은 KDC와 달리 그것을 綱 (120 Epistemology, causation, humankind)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식론의 경우 DDC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학의 경우는 그 독립성이 말살되어 있다. 아예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美”라는 항목이 있을 뿐인데 그나마 형이상학 아래 한 세목(110.7)으로, 그것도 “美에 관한 形而上學的 考察과 美學에 관한 學際的 研究”라는 한정으로 배정되어 있는 정도이고, 미학은 예술류에 목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미학에는 순수 미학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식미학 예술사회학 등도 있다. 이들까지 철학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생성과정과 역사를 놓고 볼 때 미학은 엄연히 철학의 한 분야이다. 대학의 교과과정도 미학을 철학에 넣고 그 연구영역

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미학의 철학적 성격을 강조하여 “예술철학(Philosophy of Art)”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아래 美의 개념, 美의 유형, 예술활동, 예술의 기능, 예술과 사회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박옥화, 1994, 125).

(2) 적절하며 타당하게 구분된 綱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에 “140 經學”이 있다. 영문으로는 “Chinese classics”로 표기되어 있다. 經은 중국에서 민족 고전으로 간주되는 문헌으로서 易, 書, 詩, 禮, 春秋를 가리킨다. 그리고 經學이란 유가의 경서에 대한 해석학을 지칭한다. 엄연히 중국철학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綱 “152 中國哲學” 아래 細目으로 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KDC는 細目 정도의 항목을 綱으로 격상하고, 오히려 그것의 상위에 있는 중국철학을 다른 綱의 細目로 배정하고 있다. 만약에 그 이유가 경학에는 철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면, 그것을 해당 분야에 따라 이치시키고, 철학적인 것을 중국철학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다 아무리 중국고전이 중요하고 이 분야의 문헌량이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분류법에 한국철학을 綱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綱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국우선권이 무색한 경우이다. 오늘날 한국철학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 왔고 관계문헌의 출판량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綱

의 여유만 있다면 한국철학을 독립시켜 “韓國哲學”, “東洋哲學” 그리고 “西洋哲學”으로 3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綱의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150 아시아(東洋) 哲學, 思想”과 “160 西洋哲學”이 있다. 아시아와 서양은 상관개념이 아니다. 아시아나 유럽 등은 일차적으로 지리적 개념이고 동양이나 서양은 좀 더 포괄적인, 즉 문화적 개념이다. 개정판에서는 동양과 서양, 아니면 아시아와 비아시아 등으로 그 구분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개정판은 지역구분에서 지리적 구분을 택했다. 地域區分表에 의거하여 지리적 명칭을 택할 경우, KDC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조기성은 있지만 철학의 구분에는 적절하지 않다. 문화활동의 소산인 철학에서는 국가단위의 명확한 지리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철학을 국가단위로 구분함으로써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KDC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고대와 중세의 서양철학을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대로 나눈 점이다. 고대와 중세철학은 서양철학의 공동유산이어서 지역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지역구분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생철학, 현상학이나 실존철학은 19세기 이후 유럽대륙을 풍미했던 철학의 조류들이었다. 이 분야의 내용이

풍부한 독일철학의 경우 이들 하나하나를 독립 細目으로 배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프랑스 등의 경우 개별 철학자를 이런 조류와 상관 없이 배정하여 특정 조류가 갖고 있는 흐름을 국가단위로, 그것도 원칙없이 단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동양과 서양철학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때 어디까지를 동양으로 할 것인가, 동양에 전 아시아를 포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양이라 함은 보통 중국, 한국, 일본 등을 가르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제되는 것이 서양이라는 개념이다. 남북아메리카, 대양주에 북아프리카를 위시한 아프리카 전역을 여기 포함시켜도 되는가?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서양으로 나눈 후 엄격하게 국가개념을 받아들여 국가단위로 전개할 것인가도 추후 재론해야 할 것이다.

DDC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DDC는 지역과 역사적 기준에 따라 두 개의 綱을 설치했다. “180 Ancient, medieval, Oriental philosophy”와 “190 Modern Western Philosophy”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Ancient”와 “medieval”이란 서양철학에서의 고·중세를 가리킨다.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비서양철학인데, 이것은 비서양철학이 서양에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홀대이다. 여기서 이 문제는 별개이다. 중요



한 것은 DDC는 철학을 엄격히 국가단위로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특성에 따라 여러 나라를 묶어 일정한 철학적 흐름을 존중했다. 그리고 “199 Other geographical areas”를 두어 경직된 구분을 완화시키고 있다.

### 3. 2 綱의 서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철학에서 綱의 배열, 즉 서열이다. 綱의 순서가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관심과 학습 그리고 논의 등에는 유기적 관계가 있고, 그 논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물에 대한 평가는 그 사물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이다. 철학적 영역 가운데 가장 초보단계에서 다루는 것은 올바른 사고의 방법을 습득시키는 논리학이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런 방법을 토대로 지식의 근원과 한계를 문제삼는 인식이론이다. 그리고 지식의 이론을 섭렵한 후 시도하는 것이 존재, 인간, 자연 그리고 神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형이상학의 정초이다. 이 같은 정초 뒤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인데 윤리학과 미학이 이에 속한다 (박옥화, 1994, 111). 그 다음에 시도되는 것이 철학에 대한 사적 내지 지역적 고찰이다. 특히 주제별 연구의 이 같은 단계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과편성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및 이화여대 1992-93년도 요람 참조). 물론 문헌분류가

현존하는 문헌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교과과정이라든가 학적 체계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학으로서의 철학의 범주에 들지 않는 철학서적도 많다. 그렇기는 하지만 학으로의 철학이 갖고 있는 체계를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적어도 철학류 전체의 틀에서는 그렇다.

철학류에 배정된 “180 心理學”도 그 순서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심리학을 철학의 한 주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엄연히 독립된 학문인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을 철학류에 綱으로 배정하는 것 자체는 심리학이 철학에서 파생한 학문인 이상 자연스럽다. 문제는 심리학의 독립성을 인정, 철학류를 이원화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있다. 즉 그 독립성을 인정, 여타의 철학적 綱 다음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심리학이 철학적 강 사이에 배정되어 철학적 논의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심리학의 독립이 명확히 가시화되지 않았던 초기 DDC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아니었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정의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으면서 순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는데, 이 점에 미루어 본다면 가급적 강과 목 등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개정 원칙 그 자체가 개선의 길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지적된 것을 토대로 綱을 다시 서열화한다면 어떤 순서가 될까? 필자는 이미 학위논문에서 100진법의 합리성

을 피력하면서 철학류 시안을 만든 바 있다 (박옥화, 1994, 133-141). 거기에서는 이론적으로 100개의 類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리학을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켜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개로 主類의 수효가 제한되어 있는 10진법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학문적 동근원성과 근접성에 미루어 심리학을 철학류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철학류를 우선 주제에 따라 전개하고 거기에 체계와 지역구분을 수렴한 후, 심리학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다만 “체계”를 어디에다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서양철학” 다음에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0	철학(일반)
110	논리학
120	인식론
130	형이상학
140	윤리학
150	미학
160	체계
170	동양철학
180	서양철학
190	심리학

이렇게 되면 개정판에서 공기호로 남겨둔 “120”도 적절히 이용된다. 순서 또한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 철학 전공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에게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거기에다 이와 같은 올바른 철학체

계를 숙지할 경우 철학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

#### 4. 目과 細目的 分析

이제 큰 틀을 벗어나 하위 항목인 目を 고찰해보자.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綱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인 분류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된다. 물론 많은 경우 개정판 분류위원회는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알고 있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目이하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분류위원회는 分類番號의 組織에 관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分類番號를 十進式으로 組織한 分類法에 있어서는 區分單位, 즉 區分枝가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主題의 合理的인 展開가 곤란하다. KDC에 있어서도 어떤 곳에서는 同格의 區分枝와 下位格의 區分枝를 併置하여 9區分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9區分으로 부족한 것도 있어 關聯된 主題, 接近된 主題를 併合하여 동일한 番號를 配當한 것도 있고, 혹은 主要한 主題를 1 - 8에 配當하고 기타 主題는 9에 統合하거나 그 아래서 다시 區分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十進式으로 展開된 分類法에 있어서는 9區分の 制限을 받아 分類番號 組織上 疎密의 차이가 심하며, 稠密한 곳에서는 分類番號가 길어져서 복잡하다. 또 主題의 論理的 進化에 따른 展開와 學問

의 進化에 따른 새로운 主題에 대하여 論理的인 序列位置에 插入하는 일이 곤란하며, 이를 위해서는 頻繁히 修正을 필요로 하는 短點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6, 3).

이 입장에서 밝힌 곤란과 제한 그리고 단점들, 즉 구분지의 제한에서 오는 문제로서 포섭관계에 있는 上·下의 구분지를 병치시킨 문제, 근접주제를 병합한데서 오는 문제 등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은 실제 철학류 목이하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들 문제가 제한된 수효의 구분지로 환원되므로, 과연 구분지의 수효가 분류의 논리를 훼손할만큼 제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외에도 여기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항목의 누락, 항목 사이의 균형의 문제,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의 문제, 항목선정에서의 적시성 결여문제, 단순한 오류, 국명 표기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표적인 예를 통해 유형별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구분지 제약여부의 문제

개정판의 편자들은 10진법의 특성상 구분지가 세목전개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10개로 제한되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분류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분류의 논리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수 없었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전혀 해결의 방법

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철학류를 2차적으로 10단위에서 구분하면 모두 100구분이 된다. 그것을 다시 3차적으로 구분하면 1000구분이 된다. 즉 기술적으로 10개의 綱에, 100개의 目, 그리고 1000개의 細目이 가능하다. 심리학과 같이 綱 하나에 방대한 주제를 전개해야 하는 경우에 3차적, 4차적 구분이 필요하겠으나 여타의 綱의 경우 분류의 논리를 준수한다면 10개의 구분지로도 충분하다. 즉 동급의 구분지가 10개 이상일 경우, 이들을 상위 구분지를 찾아내어 통합하면 된다. 얼마든지 피라밋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체계적 전개를 위한, 즉 상·하위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 점에 유념하여 철학류 전 체계를 재편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 (2) 누락항목의 문제

마땅히 설정되어야 했을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바로 神에 관한 이론인 神論이다. 신론은 인간과 자연과 함께 형이상학에 있어서 핵심주제의 하나이다. 흔히들 神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神이 신앙의 대상이 될 때의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고 神에 대한 개념의 유래, 그 존재여부, 존재의 증명 등 초월적 질서나 근원에 대한 것은 철학에서 다루어 온 문제들이다. 특히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神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편찬된 DDC와는 달라

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KDC는 DDC를 모범으로 한 결과 神에 관한 항목을 “200 宗教” 아래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마땅히 철학류로 이치시키는 것이 옳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 기술적 이유에서 불가피하다면 그 사실을 “110 形而上學”에서 註로 밝혀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3) 항목간의 균형의 문제

“153 日本哲學, 思想 Japanese philosophy and thought”의 경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본은 우리에게 인접국가이고, 일본이 우리나라 철학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오늘날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대부분이 일본용어임을 볼 때 그 영향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그것은 바로 일본을 통한 서양철학의 영향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일본어로 쓰여 있는 철학문헌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일본철학이 아닌 서양철학 관계 문헌이다. 실제 일본철학 자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으로서 인도철학에 비교해도 그 비중이 결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항목의 수에서 “韓國哲學”을 능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세분전개되어 있어 「韓國十進分類法」이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처럼 일본철학 전개에 각별한 비중을 둔 것은 KDC가 지금까지 DDC와 더불어 「日本十進分類法」을 크게 참조해왔기 때

문으로 보인다.

미국중심적인 DDC의 영향도 역력하다. 대표적인 예로 “162 美國哲學”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철학이 독일철학이나 프랑스 철학은 물론 영국철학의 앞에 배정되어 있다. 서양철학의 근원은 유럽대륙이다. 유럽 가운데서도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철학이라고는 하지만 그 뿌리는 대륙철학에 있다. 따라서 지역구분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마)철학에서 시작, 유럽대륙을 거쳐 신대륙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개정판의 지역구분표를 보면 유럽이 北아메리카에 앞서 있다. 그런데도 철학에서 지역구분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 DDC가 미국 분류법인 이상 자국우선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가 알기할 부할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조차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까지 서양철학 일반의 지역적 흐름을 무시해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 (4) 항목간의 상관관계 문제

항목 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들 또한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117 目的論”은 “119 因果論”과 상관관계에 있는 이론이다. 이들은 세계를 설명하는 두 방식으로서, 목적론은 주어진 목적을 향하여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고 인과론은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원인에 의해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인과론이 아니라 기계론이다. 이들은 서로 대립적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와 달리 “118 價値

論”은 세계설명 방식과는 무관한 평가이론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목적론과 인과론 사이에 끼어들어 일관성 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5) 현안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

끝으로 현안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문제이다. 즉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소주제로 소홀히 다룬 듯한 부분도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생명윤리이다. 안락사 및 장기이식의 문제와 더불어 죽음의 판정이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인간의 복제 문제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인간복제 문제는 금년에 들어 크게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생명복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인간 복제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에 관련된 문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런 추세에 미루어 적어도 생명윤리는 목적으로 독립 설정 취급되어야 하는데도 따로 배정하지 않고 가까스로 “195 職業倫理一般” 아래 항목배정의 여지를 두는데 그치고 있다. 철학적 논의의 진척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KDC와 달리 DDC(20판)는 “174.2 Medical professions” 아래 포괄적으로 생명윤리 관계 항목들을 배정, 세분전개하고 있다. 다음 개정판을 준비할 때 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6) 분류오류 등 기타

차제에 개념사용 등의 오류의 유형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번역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이는 것으로 “165. 8 現象學 및 實在主義”가 있다. “165.68”은 “實在論”으로 되어 있다. 主義나 論은 상대주의와 상대론, 합리주의와 합리론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재론과 실재주의 또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야기하는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다르다면 우리말로 옮길 때 달리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재로도 이들은 전혀 다른 두 입장 내지 흐름이다. “165.8” 아래 하이데거, 야스퍼스를 배정한 것에 미루어 여기에서 “실재주의”는 實存哲學 또는 實存主義를 잘못 옮긴 것으로 보인다 (박옥화, 1992a, 20).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것도 있다. “136 自然主義” 하에 있는 “136.5 進化論”의 경우이다. 진화론에는 철학적인 것이 있고 생물학적인 것이 있다. 특히 19세기의 다윈 등의 진화론은 철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예의 항목 아래 “物理學에 있어서의 進化論 → 476.01”으로 되어 있다. “476”은 生物進化에 대한 항목이며 “476.01”은 “進化論”으로서 그 아래 다윈과 라마르크 등의 진화론을 두고 있다. 따라서 “物理學에 있어서의 進化論”은 “生物學에 있어서의 進化論”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구분에서 나라이름의 표기에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우리가 불러온 대로 “韓國”, “印度”, “美國”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독일”, “영국” 등 순수

우리글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거기에는 미국 영향의 미국식 국가이름이 있다. 즉 국명들이 미국식으로 되어 있어 고유 명사에서의 원음주의라는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있다. 스페인이 그 경우이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과서는 물론 지리부도에는 에스파냐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원음을 따르기도 했다. 즉 에스파냐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미국식으로 아르헨티나라 하지 않고 아르헨티나라는 원음을 따랐다. 이것은 물론 철학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KDC 전체에 일관되는 오류이기도 하다. 이런 혼란은 분류실무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줄 것이다.

잘못된 지역구분의 예들도 있다. 그 하나가 “167 스페인철학” 아래의 “167.9 포르투갈철학”이다. 포르투갈은 에스파냐와 다른 고유의 언어와 철학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에스파냐와 동격이다. DDC(20판)도 이에 이들 이베리아반도 국가들을 “196 Spain and Portugal” 아래 각각 “196. 1 Spain”, “196. 9 Portugal”로 전개하고 있다. 다음 개정에서 바로 잡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개선된 부분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개정판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몇몇 취약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개정판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개선방향과 내용은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改正 試案’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를 중심으로 개선된 부분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몇몇 항목을 제3판에서와 달리 세목까지 세부전개하여 구분력을 크게 높였다. “112 存在論”과 “115 認識論”이 그 예들이다. 즉 세 개의 細目으로 되어 있던 존재론을 일곱 개의 細目으로 확대전개한 것이다. 인식론의 경우는 더욱 세분했는데, DDC 20판을 모범으로 확대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 결과 이들이 그 짜임새에서나 내용에서 크게 보강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그만큼 도모되었다. 뚜렷한 개선이라 할 것이다.

(2) 항목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개념이 명료해졌다. 그 예의 하나가 제3판에는 “인간학”(Philosophic anthropology)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114 哲學的 人間學”으로 한 것이다. 인간학에는 철학적 인간학이 있고 생물학적 인간학이 있다. 철학적 인간학에서는 생물학적 인간학에서와 달리 인간의 성품, 영혼과 생사의 문제 등을 다룬다. 이번 개정에서 그것을 원의에 따라 “철학적 인간학”으로 한 것은 옳은 일이다. 생물학적

인간학과 다른 점이 이로써 부각되고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주제들이 좀 더 명확해진 것이다. 이외에도 “162 아메리카哲學 American philosophy”을 “美國哲學”으로 바꾸어 개념을 명료하게 한정하였다. 이것은 편자들이 항목 명칭에 관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고무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3) 철학류는 그 특성상 여타 어느 류보다 서양인명이 많아 인명표기에서 그만큼 오류도 많았었다. 예를 들면 철자오류, 표기상의 오류, 생몰년의 착오 등이다. 개정판에서는 이 오류들을 바로 잡아 나갔다. 또한 서양철학자 인명 기입을 姓名順에서 名姓順으로 바꾸는 등 작은 부분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

## 6. 결 론

지금까지 개략적으로나마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을 검토, 개선된 점들과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들을 살펴 보았다. 세부전개를 통해 구분력을 높이고, 항목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념을 명료화하며 표기상의 오류 등을 고치는 등 적지 않은 개선이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 아직도 미진한 점들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미진한 점을 남길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KDC가 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KDC가 독자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찬되었다기 보다는 DDC의 바탕 위에 편집된 것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한들이 아니었다. 예컨대 강의 구분과 서열에서 자국우선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우리 현실을 외면한 듯한 느낌을 준다. 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있고 개념이 잘못 사용된 경우도 있다. 항목 간의 불균형에 분류의 오류로 지적받을 만한 것들도 확인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철학과의 학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분류위원회 구성의 개혁이다. 우선 소위원회의 수효를 類의 수효만큼 늘려 전담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우리 문헌정보학 관계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학자를 참여시켜 좀 더 현실적인, 적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분야 학문의 진화과정에 맞게 항목의 첨삭이 가능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분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추세에 따라 앞으로의 이용자의 관심이나 문헌출판의 방향을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朴玉花. 1992a. “우리나라에 있어서 철학 류의 분류문제.” 도서관 47(5): 3-22.
- . 1992b. “지식분류의 역사적 고찰.”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3 : 25-45.
- . 1994. 哲學類의 새로운 分類展開에 관한 研究, 서울 : 中央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4.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改正 試案 : 일반형식구분 순수과학 기술과학.” 圖書館文化 35(4) : 177-205.
- 韓國圖書館協會分類分科委員會. 1980.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1996.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 Blazek, R. & Aversa, E. 1988. The Humanities : A Selective Guide to Information Sources, 3rd ed. Englewood, Col. : Libraries Unlimited.
- Bliss, H. E. 1939.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New York : Wilson.
- Hessen, J. 1950-1961. Lehrbuch der Philosophie, vol. 1-3. München : Ernst Reinhardt Verlag.